

정부, 12조대 추경안 국회 제출…민주 “턱없이 부족”

상임위 심사 거쳐 다음주 예결특위 박찬대 “방향도 잘못…15조로 증액”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증액해야” 국힘 “소상공인 지원 등 소폭 증액”

정부가 전날 국회에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산자중기위를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고, 다음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추경이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행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즐기게 강조해 왔다”며 “여기에 대형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추경은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0.1%p에 그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에게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추경 증액 항목으로 지역화폐 등이 거론됐다.

이들은 “소비진작을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장비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이

증액돼야 하며, 대한민국이 AI(인공지능)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예산도 증액돼야 할 것”이라며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 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객기참사, 경북 산불재해 관광소비 피해 회복 예산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분야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의 규모는 다소 증

액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려 편성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진작 등을 위해 소폭 증액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산불, 통상·AI,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춘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지원(4조3000억원)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 초까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박군택 법률단장 “대선 전 판결 나오기 어려워”

李 선거법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군택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에 대해, “대선 전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재판관에게 자료를 넘겨서 연구관, 대법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회의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거친다”며 “빨라도 4~5개월



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전에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거나 (이 후보에 대한) 무죄 확정으로 나와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며 “아마 재판 속도 관행상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통 예측해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진 못하게 될 것 같다. 그걸 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도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사안이 (상고심에서) 몇달 만에 끝났다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당 방송·콘텐츠 특위 출범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계원 “정부, 유화산업 위기 대책 마련 촉구”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사진)은 22일 정부를 향해 위기에 내몰린 유화 산업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선도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유화산업은 중국의 생산량 증설로 인한 글로벌 범용제품의 공급과잉,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유화산업이 무너지면 그 타격이 기업은 물론 기업이 입주한 지역, 특히 여수지역 경제, 플랜트 건설근로자 고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수지역 플랜트 건설근로자 연도



별 1월 기준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922명, 2024년은 7557명, 올해 1월은 1780명으로 지난해 대비 577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지나주 대정부 질의에서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업체의 자율사업 재편 계획을 갖고 오면 지원하겠다’는 맹탕 답변만 반복했다”면서 “정부 자원 및 기금을 활용해 산업 위기 선제 대응지역 내 전기 요금을 감면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며 기업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지원 “고위공직자 해외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사진)은 22일 고위공직자의 자산 중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관련성 인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0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주식만을 대상으로 하



고 있어 공직자의 해외주식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현지화되어 있고, 이들은 실제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이나 납세, 소송, 입찰 등 많은 행정작용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도의회 “전남 국립의대 반드시 설립돼야”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 비판 “지역현안 넘은 국가·정부의 책무”

전라남도의회는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동결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2027학년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정부가 지난 4월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면서, 전남 국립의대의 2026학년도 개교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남 도민의 오랜 염원이 또다시 좌절되면서 그 아픔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이번 발표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라남도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자체로, 고령화와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고,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의료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도의회는 지적했다.

이어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매년 70만 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전남의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서는 안 된다”며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의 책무이자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은 정권 변화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2026년 의과대학 모집인원 동결 여부와는 별개로, 2027학년도에는 반드시 전남 국립의대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전남의대 설립을 바라는 20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민주 선관위 “여론조사업체 용역수행 문제없어”

김동연측 “납득 안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경선 여론조사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해달라는 김동연 경선후보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후보 측에 보낸 서면 입장문에서 “기존 선정된 업체의 용역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여론조사

업체 ‘시그널앰펠스’가 지난 총선 당시 불공정 논란에 휘말렸으며 이번 경선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선관위는 “해당업체는 총선 이전부터 당 조사용역을 수행해온 업체이고, 총선 당시에도 어떤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없다”며 “이번 선정과정에서도 실사 등을 통한 적격한 업체 중 추첨을 통해 선정돼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동연 캠프 고영인 대리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론도 문제 제기를 했고, 경선에 참여하는 당사자인 김 후보가 이 부분에 의혹이 있다고 (업체 교체)를 요구하는데 교체를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금이라도 업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김 후보 측의 다른 요구사항은 일부 받아들였다.

선관위는 후보자 소개글을 담은 홍보문자를 관리당원 대상으로 선거일 하루 전 1회 발송하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